

# 국방부 보고서 '6기 캠프 보관' 문구 삭제

## 사드 반입보고 누락 전말

- 26일 업무보고 확인서 첫 인지
- 28일 국방장관 "몰랐다" 발뺌
- 29일 문대통령에 사실 보고

청와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에 대한 보고 내용과 보고 과정을 면밀히 분석,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보고 누락을 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국가안보실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드 발사대 4기가 비공개로 추가 반입된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했고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문의에도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난 31일 운영찬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밝혔다. 전날 보고 누락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조사 지시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에서 논란이 일자 그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국방부, 보고서에 추가 반입 사실 제외=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국방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드가 우리나라에 전개돼 있다는 취지로 포괄적으로 기술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도 캠프에 보관"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 문구가 빠졌다. 청와대는 전날 군(軍) 관계자를 불러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의도적 보고 누락"으로 판단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고서 내용에 대해 "구체적 내용은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그 보고를 들은 분이 그 내용(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을 인지할 수 있는냐에 대해서는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사드 4기 추가 반입 최초 인지 과정=지난 21일 임명된 정의용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청와대는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반입 보고 누락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한 지 하루 만에 '의도적 보고 누락'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

은 26일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24일 선임된 이상철 안보실 1차장과 김기정 안보실 2차장도 있었으며 보고 내용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상철 1차장은 26일 오후 7시30분께 업무보고에 참석했던 한 국방부 관계자를 사무실로 불러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드 발사대 4기가 비공개로 국내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이상철 1차장은 27일 정 안보실장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했다.

이에 정 안보실장은 28일 한 국방부장관과의 오찬에서 '사드 4기가 추가로 들어왔다면서요'라고 물었으나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고 운영찬 수석이 밝혔다.

정 안보실장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은 국방부 보고서 외에 사드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담은 별도 보고서도 작성했다.

문 대통령은 정 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가와 국민의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드 배치가 국민도 모른 채 진행됐고 새 정부가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 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임에도 국방부가 이런 내용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나름대로 내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생각도 정리" (청와대 고위 관계자)한 뒤 30일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반입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방뉴스

# 與 "경악" vs 野 "안보 자해"

## 靑, 은폐 가능성 조사 예고... 정치권 격돌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논란과 관련, 정치권이 다시 격돌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경악스럽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자해 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외교 무능을 드러냈다고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을 확인한 과정을 설명하며 국방부가 고의로 은폐했을 가능성까지 있다고 보고 국방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방부가 25일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와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업무보고 때 추가 반입을 보고하지 않은 데다 직접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주말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오찬 때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공식 확인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한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반입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곧바로 민정수석실 등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청와대를 거들었다. 추미애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떻게 대선 직전 국민 몰래 무려 4기의 사드(발사대)가 몰래 들어올 수 있었는지 정말 경악스럽다"며 "더 놀라운 것은 국방부가 이런 사실을 새 정부에 제대로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드 1개 포대는 6개의 발사대로 이뤄져 있고 4기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확인된 지가 언제인데 대통령이 이제 알았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도발을 연일 계속 하는데 대통령은 국가 안보 핵심 사안인 사드 배치에 대해 스스로 문제 제기하는 지해행위를 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29일 야 사드 4기 추가보고 누락을 알았다면 그동안 맨손으로 (특사단인) 트럼프와 시진핑을 만나 얘기한 셈이다. 심각한 외교·안보 무능을 드러냈다"고 맹비난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추가 반입을) 몰랐다는 것도 문제이고, 또 청와대 보고체계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논란이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 문제로 될 수 있어 주목된다. 여권 내부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 국회 비준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라며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靑 경호처 신설 차관급 처장으로

## 국정기획위, 경호실 폐지 대신 업무 이관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청와대 경호실을 폐지하고 경호실 기능을 경찰청 내 경호국으로 이관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경호처를 만들고 이를 차관급 처장을 임명하는 등 직급을 지금보다 낮추는 방안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이 방안

에 대해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박범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일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운영위에서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에게 이런 방안이 보고가 됐고 모든 위원이 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 경호실 폐지 공약은 '광화문 대통령' 공약과 연계돼 있는데, 아직은 이를 이행할 인적·물적 토대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며 "경호실 문제는 이후 '광화문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이 논의는 보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울러 개편 방식에 있어서도 "이 시점에서 경호실을 경찰청 경호국으로 옮기는 것은 무리"라며 "대신 열린 경호와 낮은 경호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취지에는 변함이 없다. 청와대 내에 별도의 경호처를 신설하고 직급을 현재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낮추는 방안이 가장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가 내린 결론대로 청와대에 별도의 경호처를 신설하는 방안이 확정된다면 경호업무의 경찰청 이관은 장기과제가 되거나 이번 정부에서는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당정, 일자리 추경 11조원 6월 임시국회서 처리키로

## 국채 발행없이 초과 세수 편성

정부와 민주당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국채 발행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에서 민주당은 ▲국민 안전·치안·복지 서비스 분야 공무원 및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 확충 ▲노인 일자리 급여 적정 수준 인상 ▲치매 치료·요양 예산 대폭 확충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간 기존 2배 수준 인상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정부 측은 "위 사항들을 금년 추경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당에 요청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일자리 추경으로 지방에도 상당액의 교부금이 교부된다"며 "지방정부도 일자리 추경의 취지를 살려 교부되는 교부

금의 지역 일자리 창출에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여당의 추가 요구로 추경 규모가 애초 계획된 11조원에서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번 추경 재원 조달의 성격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세계 잉여금과 초과 세수로 편성된다"며 "당의 요구가 있다라도 전체 규모 안에서 조정된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 재원에 대해서 "11조원 중에 세계 잉여금이 1조1천억원이고 나머지는

세수분인데 전체 다는 아니고 기금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야당 일각에서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 "명확히 명시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당은 없다"며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당정협의에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전병헌 정부수석 등이 각각 자리했다. /임동욱기자 tuim@

## 유한회사 J&Y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

###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상가, 공장, 토지, 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 NPL채권 매입하여 투자 수익에 참여하실 분

- ▶ 총 매입금액 : 11억원
- ▶ 1인 2,000만원 이상
- ▶ 투자금 회수기간 : 6~8개월
- ▶ 근저당설정 조건

- 채권 물건지는 투자하시는 분에 한하여 공개합니다.

##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자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

## 유한회사 J&Y 대부 ☎ 062)382-4987

사업자등록번호 635-86-00606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4954